

머리말

이 책의 작업에 참여한 필자들이 모여서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은 2014년 9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 후 1년여 동안 공부의 방향을 잡기 위한 난상토론을 벌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논제들을 거칠게나마 모아서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 국가안보의 새로운 방향모색』(인간사랑, 2015)을 펴냈다. 향후 적어도 한 세대를 내다보는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 책의 필자들이 주목한 화두는 국가안보의 미래였다. 과거와는 달리 미래의 국가안보는 군사안보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문제시되고 전통안보의 주체인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여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을 예견케 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리라는 것이 필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년차의 공부모임을 통해서 구체화되었으며 개념적·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경험적 사례와 실천적 합의를 보완하여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의 필자들이 본격적으로 탐구한 논제는 ‘신흥안보(新興安保, emerging security)’이다. 제1장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듯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신흥안보라는 말은 단순히 ‘새로운 안보’라는 의미만은 아니다. ‘신흥(新興)’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emergence’의 번역어이다. 국내 자연과학계에서는 흔히 ‘창발(創發)’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책에서는 안보라는 말과의 합성을 고려하여 신흥이라고 번역하였다. 개념으로서의 신흥 또는 창발이란 미시적 단계에서는 단순하고 무질서한 존재에 불과했던 현상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벌이는 가운데 상호 연계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거시적 단계에 이르러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 즉 질서를 드러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안보의 개념과 연결시키면, 신흥안보란 미시적 차원에서는 단순히 소규모 단위의 안전(安全, safety)의 문제였는데 거시적 차원으로 가면서 좀 더 대규모 단위의 안보(安保, security) 문제가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흥안보의 개념은 ‘비전통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로 대변되던, 기존의 소극적인 개념화를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날의 안보현상을 이해하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 책의 부제를 ‘비전통 안보론을 넘어서’라고 붙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비전통 안보라는 말은 새로운 안보현상의 성격을 전통안보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화시켜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전통안보에 비해서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느낌을 준다. 다시 말해, 마치 군사안보를 위주로 한 전통안보가 상위에 있고 그 외의 나머지 안보 문제들이 그 하위에 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다분히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안보현상의 성격은 이렇게 이분법적 구도에서 핵심 문제와 주변 문제로 나누어 보기에는 너무나도 복합적인 면모를 띠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책의 필자들은 미래의 안보를 부르는 용어 자체를

고민하였고, 결국 신흥안보라는 개념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제시한 신흥안보는 그 개념적 내포라는 점에서 전통안보를 포괄한다. 복합 시스템의 맥락에서 보는 신흥안보는 시스템 내 미시적 상호작용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질적으로 변화하여 이른바 ‘양질전화(量質轉化)’의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전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게다가 신흥안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들의 ‘이슈연계성’이 높아지면, 어느 한 부문에서는 미시적 안전의 문제였던 것이 국가 전체의 거시적 안보 문제가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렇게 양질전화와 이슈연계성의 사다리를 타고서 창발하는 종류의 위험에 대해서 ‘전통안보냐 비전통 안보냐?’라고 묻고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색할 수도 있다. 창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신흥안보의 이슈들은 언제 어떻게 국가적 중대 사안이 되어 국가 행위자들 간 갈등의 빌미가 되거나 그 해결을 위해서도 국가 행위자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험들은 이렇게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신흥안보의 문제들이다. 이 책에서 사례로 다루고 있는, 환경안보, 기후변화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원자력안보, 사이버 안보, 인구안보, 이주·난민안보, 보건안보, 인권안보, 사회경제안보, 정체성안보, 정치사회통합, 해양안보 등의 경우가 모두 그렇하다. 이러한 신흥안보의 부상은 안보담론의 변화뿐만 아니라 안보게임에 관여하는 행위자의 성격과 이들이 벌이는 안보게임의 권력 정치적 양상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흥안보의 부상은 단순히 안보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21세기 세계정치 전반의 변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흥안보의 부상은 단순히 전통안보를 대체하는 새로운 안보현상의 등장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전통안보와 비전통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의미에서 이해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으로서 신흥안보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의 개발은 이 책에 참여한 필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시스템 차원의 복합성이 커지고 이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위협이 창발하는 상황에서 전통안보에 대한 대응을 전제로 한 기존 국가안보 전략의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위계조직 일변도의 발상을 넘어서야 한다. 위협이 발생하는 영역이 양적으로 많아지고 질적으로 달라진 만큼 이에 대처하는 주체라는 점에서도 국가 이외의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발상이 필요하다. 또한 신흥안보의 위협이 초국적이고 글로벌 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일국 단위를 넘어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신흥안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새로운 안보 거버넌스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흥안보 거버넌스의 내용을 탐구하는 문제는 이 책의 작업을 통해서 필자들이 제기한 향후의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제1장 '신흥안보와 미래전략: 개념적·이론적 이해(김상배)'는 이 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복합 시스템을 배경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논의를 펼쳤다. 신흥과 안보, 신흥안보의 개념을 검토하는 동시에 신흥안보의 부상에 대응하는 거버넌스의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의 여타 장이 수행한 사례연구들의 개념적·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제1장이 의도한 바는 새로운 안보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이론의 모색이었다. 사실 1990년대부터 탈냉전을 배경으로 하여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이

론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201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탈근대적 변환을 겪고 있는 안보 문제를 다루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1장은 복잡계 이론, 네트워크 이론, 조직이론, 진화생물학 등에서 제시한 이론적 논의들, 즉 창발, 자기조직화, 임계성, 구조적 공백, 양질전화, X-이벤트, 비인간(non-human) 행위자, 안보화, 네트워크 국가, 메타 거버넌스, 적합력, 복원력 등과 같은 개념들을 원용하여 신흥안보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펼쳤다.

이러한 개념적·이론적 시각을 적용해서 볼 때, 이 책에서 다룬 12개의 신흥안보 사례들은 크게 자연시스템, 기술시스템, 사회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신흥안보와 이러한 와중에 변환을 겪고 있는 신흥안보로서 인간안보 등의 네 개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범주에는 환경안보와 기후변화안보, 식량안보와 에너지 안보 등과 같이 자연시스템을 배경으로 한 신흥안보 사례들이 해당된다. 두 번째 범주에는 원자력안보와 사이버 안보와 같이 기술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흥안보 사례들이 있다. 세 번째 범주에는 경제적 불평등, 종교와 정체성, 정치사회 통합, 해양안보와 같이 사회시스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문화·정치·사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신흥안보 사례들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범주에 속하는 사례들은 인구안보, 이주 및 난민 문제, 보건안보, 인권 등과 같이 인간안보와 밀접히 연관된 신흥안보의 문제들이다(<그림 1> 참조).

제1부는 자연시스템과 기술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신흥안보의 사례로서 환경안보, 식량·에너지 안보, 원자력안보, 사이버 안보 등을 다룬 네 편의 글을 실었다.

제2장 '환경안보와 기후변화안보(이태동)'는 글로벌 차원에서 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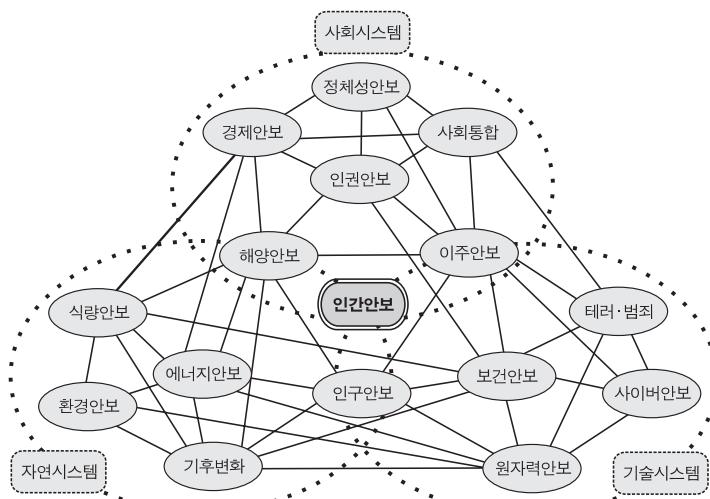


그림 1. 복합 시스템과 신흥안보의 부상

어지는 기후변화, 환경오염의 증가, 자원고갈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기후변화안보와 환경안보는 그 원인을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에서 찾는 차이는 있지만, 환경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경제·정치 시스템의 취약성이 국내외 무력분쟁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공급 측면에서 자원감소, 수요 측면에서 인구증가 등과 같은 환경자원의 결핍은 농업과 경제적 생산성의 약화와 이주, 국가 관리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내전이나 국가 간 전쟁 등의 폭력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기후변화의 경우도, 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폭우, 폭염,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강도가 커질 때 사회·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큰 부담을 준다. 기술발전과 무역이 기후·환경 안보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지만, 경제·기술 발전이 더딘 지역은 오히려 기후·환경 안보에 더욱 취약할 수도 있다. 전통안보와 비

교할 때 환경과 기후변화 위협은 더디고 만성적이며 비의도적인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후·환경 안보의 영향을 인간안보, 즉 개인 삶의 질의 보장과 향상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3장 ‘식량·에너지 복합안보와 미래전략(신범식)’은 에너지 가격변동과 식량위기가 지니는 복합성과 이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농업혁명 이후 식량생산이 자연환경 조건에만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 고도의 에너지 다(多)소비형 및 탄소 다(多)배출형 산업으로 변모하면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식량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2007-2008년 세계 식량위기는 석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가격에 의한 수급 조절의 기능으로 제어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곡물시장에서 식량용 곡물을 바이오연료용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을 시행함에 따라 식량위기를 촉발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석유 시장과 곡물 시장의 메커니즘이 시장원리에 따라 조절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속적이며 높은 수준의 압력 하에서 양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장은 이러한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가 복합적으로 상호 연계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하면서 최대한 복합위기의 양태와 효과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국가적 차원의 식량·에너지 복합안보의 미래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4장 ‘원자력의 복합성과 신흥안보(배영자)’는 한국이 당면한 원자력발전 문제를 복합성과 신흥안보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원자력발전은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안전 문제가 특정한 계기를 통해 거시적 안보나 지정학적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흥안보의 이

슈이다. 미시적 안전성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원자력발전의 운영이 비교적 안전하게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나 일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해 왔으며, 한국 원전 일부가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원자력발전 안전성 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밝혔다. 원자력발전의 일상적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넘어 원자력발전이 사이버 테러나 지진 해일과 같은 대형 자연재해와 연계될 때 거시적 안보 이슈로 발전하게 된다. 2015년 한국 수력원자력에 대한 사이버 공격, 한국 원전 위치지역 지진 취약성 및 원전 밀집도 등을 사례로 한국 원자력발전이 거시적 안보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중국 원전사고로 누출된 방사능이 편서풍에 의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 많은 원전이 운영되고 건설 중인 상황이 야기할 지정학적 갈등의 가능성도 지적하였다.

제5장 ‘사이버 안보와 안보화 경쟁(조화순·김민제)’은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사이버 범죄와 테러, 정보 탈취 등의 위협이 제기되면서 사이버 안보라는 새로운 과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이버 위협과 공격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의 속성을 이용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우 쉽고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적대적 대상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제5장은 사이버 안보가 신흥안보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새로운 안보 이슈에 대한 안보전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과 갈등의 양상을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개발된 ‘안보화’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초국경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근대국가의 물리적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안보를 확보해 왔던 전통안보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해

서는 이것이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인지,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제되고 제거되어야 할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가와 집단이 인식을 달리하며 이것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외 차원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안보화 경쟁을 살펴보는 작업이 한국의 미래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2부는 신흥안보로서 창발하는 인간안보의 사례로 인구안보, 이주·난민 안보, 보건안보, 인권 등을 다룬 네 편의 글을 실었다.

제6장 ‘인구안보의 미래전략(신성호)’은 지난 수십 년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인구문제의 양극화가 어떻게 각국의 경제와 사회문제를 넘어서 21세기 새로운 안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인구문제가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와 동북아, 특히 한중일 3국에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한국의 미래와 안보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이 속한 OECD 선진국이나 동북아 지역의 경우 지난 100여 년간 진행된 사회 변화 속에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정치·경제는 물론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현상과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인구절벽’이라 불리는 극단적인 노동력, 구매력, 소득부분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경제 불황을 야기한다.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정부재정이 심한 압박을 받으며 이는 여타 부분, 특히 국방부분의 지출에 대한 새로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같이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는 군인력 자원 충원의 한계를 가져오면서 국가안보에 도전을 야기하고 있어 미래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7장 ‘국제이주 및 난민문제의 안보적 접근(이신화)’은 점점 심

각해지고 복잡해지는 국제이주 및 난민문제의 역사적 변천과 쟁점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특히 인도적 위기에 처한 ‘무기력한 피해자’로서의 난민뿐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국가 간 관계나 한 지역 내에 사회불안 및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논함으로써 이주 및 난민문제를 인도적 측면을 넘어서는 안보적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제7장은 인도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접수국의 온정주의에만 의존하는 접근법만으로는 점점 증가하는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주나 난민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가이기주의, 힘 있는 국가가 지향하는 규범과 국제규범간의 상충, 국제기구의 재정부족과 행정문제 등으로 인해 인도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사회불안, 안보위협화 등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난민들을 방치하거나 외면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자국의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는 있지만, 이들 문제를 인도적 피해자인 동시에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안보위협의 주요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정치적(Realpolitik)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급증하는 이주 및 난민사태 해결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접근법일 것이다.

제8장 ‘보건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정혜주)’는 WHO의 국제위생규칙(International Sanitary Regulation)의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으로의 개정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서 최근 증대되고 있는 보건안보에 대한 관심의 의미를 다루었다. 2005년에 개정된 IHR은 보건안보의 개념과 대상질환, 관련국가의 범주를 크게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IHR의 실행을 보조하기 위한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가 등장하며 보건안보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건강과 인권을 중심으로 전염병을 사고하는 접근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사회의 모든 조건들

은 인구집단의 건강결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건강결과는 개인의 사회적 성취와 인간안보의 근본적 기반이 되어, 인권안보를 포함하는 다른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을 모든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관점(Health in All Policies: HiAP)의 의미를 다시 상기 할 필요가 있다. 보건안보를 전염병 관리라는 좁은 의미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국경관리와 같은 외교적 노력 뿐 아니라 보건의료 시스템의 정비,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활동이 다차원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9장 ‘인권, 안보 그리고 인권안보의 가능성과 한계(김현준)’는 인권과 안보라는 개념이 국내, 국제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 발전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사건 전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안보와 인권에 대한 논의들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첫째, 생명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뿐만 아니라, 자유권, 평등권 등 다양한 인권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둘째, 국가 테러리즘이 아닌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테러리즘이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특히 안보 논의에 있어서 비국가 행위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셋째, 인권과 안보 간 긴장관계와 그 상충성(trade-off)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넷째, 이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과 안보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개념화가 시도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보호책임이나 안전권(right to security) 등의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안보 추구를 위한 국가의 행위에 대한 유엔과 NGO 등 다양한 국제 사회 내 비국가 행위자들의 영향력에 대한 강조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9장은 최근 발생한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한 논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는 인권과 안보 간 관계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3부는 사회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신흥안보의 사례로서 경제적 불평등, 종교와 안보, 사회통합, 해양안보 등을 다룬 네 편의 글을 실었다.

제10장 ‘경제적 불평등의 증대와 신흥안보(이승주)’는 최근 특정 국가에 그치지 않고, 대다수 국가들에서 나타남으로써 세계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 될 우려를 낳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신흥안보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국내적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특히 다른 사회적 또는 문화적 불평등과 결합될 때, 내전과 같은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반면, 국제적 차원에서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진행된 세계화와 경제 통합은 그 이념적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와 경제 통합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위기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을 국내외적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점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일부 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제반 요인들의 동시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제10장은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보다 거시적 차원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1장 ‘종교와 안보: 정체성의 정치(조홍식)’는 세 가지 차원에서 종교와 안보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첫째는 전통안보와 종교의 관계이다. 종교는 국가의 정치 기능과 긴밀하게 융합하여 모든 안보 문제와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핵심을 형성하였다. 종교와 정치, 그

리고 결국 안보와의 구분이 확실해지고 거리가 멀어진 것은 세속주의의 발전과 함께하고 말할 수 있으나 이것도 일부 서구에 한정된 현상이다. 둘째, 최근 학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관심은 인간안보라는 개념에 비추어 종교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다. 인간안보란 단순히 전쟁과 평화, 안보와 치안이라는 물리적 차원을 벗어나 더 넓게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안정과 복지를 사고하는 접근법이다. 셋째, 전통안보와 인간안보를 포괄하는 안정적 삶의 조건이라는 차원에서 종교에 대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학술적이고 정책적인 과제다. 이는 테러나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정책에서부터 ‘복지정책에 어떻게 종교적 집단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가’까지 무척 다양한 안건을 포함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11장은 한국도 어떤 태도와 정책으로 종교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12장 ‘사회통합과 신흥안보(황지환)’는 신흥안보의 한 요소로서 사회안보 개념에 주목하고,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에 사회통합과 사회안보 개념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 한국 내에서 그 동안 안보 논의는 주로 북핵문제, 한반도 주변 강대국 관계, 통일환경 등 군사적, 외교적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안보(societal security) 문제들을 다루는데는 소홀했다고 지적한다. 사회안보 개념은 최근 유럽의 학계에서 코펜하겐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사회안보는 ‘변화하는 환경이나 실제하는 위협하에서도 본질적인 속성을 유지하는 사회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국가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안보주체로 중요하다는 점이나 주로 경제적, 사회환경 영역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안보 개념과 차별화된다. 국내의 소수자들이 국가나 기타 다수계층에 의해

위협받는 경우나, 국가나 다른 정치적 행위자들이 대내외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사회를 동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안보 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협할 수 있는데, 사회의 새로운 집단 정체성 형성을 통해 사회의 응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12장은 정당의 사회통합과 갈등조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13장 ‘해양 분야의 신흥안보와 미래전략(구민교)’은 신흥안보 관점에서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 특히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신흥안보 관점에서 본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냉전 당시 태평양과 인도양의 제해권을 두고 미소 양 진영이 치렀던 전통적 해양 군비경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신 해양패권 경쟁은 과거의 단속적 상태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거시적인 안보 문제로 창궐하고 있다. 미중 간 신 해양패권 경쟁을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의 임계점은 2015년 여름부터 불어진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의 인공섬 및 군사기지화 정책이다. 이는 미중 양측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불사하며 무력시위를 계속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유사시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외교적 및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아라비아해-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는 한국 경제의 생명선이므로 이들 해역에서의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흥 해양안보 이슈를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단기

적 결과도출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적 안목개발을 지향하는 ‘한국의 중장기 미래전략’ 공부모임에 기꺼이 동참하고 지원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이 공부모임은 지난 2년여 동안의 세미나 모임을 가지면서 ‘미래전략네트워크(일명 미전네)’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다. 미전네를 통해서 이루어진 발표와 토론은 신흥안보의 담론을 제기하려는 이 책의 과감한 시도가 용기를 내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한 지적 토양이었다. 미전네의 토론이 계속 이어가서 현재 필자들이 ‘한반도 신흥안보의 복합 지정학’이라는 잠정제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 번째 작업이 조만간 독자들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성심껏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사회평론아카데미의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원고 교정 작업을 도와준 이은솔, 김지훈, 김유정, 문영란, 이요셉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6년 8월 10일

김상배

차례

머리말 5

제1부 자연 및 기술시스템과 신흥안보의 창발

제1장 신흥안보와 미래전략: 개념적·이론적 이해 김상배

- I. 머리말 27
- II. 새로운 안보이론에 대한 기존 논의 32
- III. 신흥안보, 그 창발의 개념화 36
- IV. 신흥안보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색 47
- V. 맷음말 63

제2장 환경안보와 기후변화안보 이태동

- I. 서론 72
- II. 환경안보와 기후변화안보의 등장 배경과 개념 73
- III. 환경안보·기후변화안보 변수와 인과관계 비교 80
- IV. 기후변화안보와 환경안보에 대한 비판적 고찰 89
- V. 환경안보와 기후변화안보 개념의 확대 적용 96
- VI. 결론 103

제3장 식량·에너지 복합안보와 미래전략 신범식

- I. 문제 제기 110
- II. 식량안보와 식량위기 115
- III. 식량위기의 원인으로서 에너지 문제 123
- IV. 새로운 미래 도전과 과제 134

제4장 원자력의 복합성과 신흥안보 배영자

- I. 문제 제기 146
- II. 원자력발전 개황 148
- III. 원자력발전의 영역과 행위자의 복합성 151
- IV. 원자력발전과 신흥안보 164
- V. 한국 원자력발전 미래전략 173

제5장 사이버 안보와 안보화 경쟁 조화순·김민제

- I. 서론 180
- II. 네트워크 사회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공격 182
- III.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 189
- IV. 글로벌 사이버 안보 갈등과 미·중의 거버넌스 경쟁 194
- V. 한국의 사이버 안보와 안보화 200
- VI. 사이버 안보를 위한 미래전략 205

제2부 신흥안보로서 인간안보의 창발

제6장 인구안보의 미래전략 신성호

- I. 서론 213
- II. 21세기 인구변화와 인구안보 215
- III. 한국 인구변화와 의미 226
- IV. 결론 235

제7장 국제이주 및 난민문제의 안보적 접근 이신화

- I. 서론 241
- II. 국제이주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현황 243
- III. 세계난민문제의 유형과 특성 251
- IV. 안보위협으로서의 이주자 및 난민문제 256
- V. 이주 및 난민안보와 한국에의 함의 262
- VI. 결론 269

제8장 보건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 정혜주

- I. 서론: 공중보건이 안보의 문제가 될 때 276
- II. 보건안보의 정의 278
- III. 보건안보의 전개: WHO를 중심으로 285
- IV. 결론 및 합의 304

제9장 인권, 안보, 그리고 인권안보의 가능성과 한계 김현준

- I. 서론 315
- II. 인권(Human Rights) 318
- III. 인권과 안보 325
- IV. 인권안보의 가능성과 한계 330
- V. 결론 345

제3부 사회시스템과 신흥안보의 창발

제10장 경제적 불평등의 증대와 신흥안보 이승주

- I. 서론 353
- II. 불평등의 지구적 확산 354
- III. 경제적 불평등과 신흥안보 360
- IV. 정책적 시사점 368
- V. 결론 375

제11장 종교와 안보: 정체성의 정치 조홍식

- I. 서론: 정체성의 정치 381
- II. 전통안보와 종교 387
- III. 인간안보와 종교 394
- IV. 종교, 안보, 그리고 정책 401
- V. 결론: 한국에 주는 시사점 407

제12장 사회통합과 신흥안보 황지환

- I. 머리말 414
- II. 사회통합과 사회안보 개념의 등장 416
- III. 신흥안보 요소로서 사회통합 사례 418
- IV. 사회통합과 사회안보의 과정: 정당의 사회통합 역할 428
- V. 맺음말 431

제13장 해양 분야의 신흥안보 이슈와 미래전략 구민교

- I. 서론 436
- II. 해상교통로 이슈의 역사적 기원과 규범적 함의 441
- III.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상교통로 이슈의 창발과정 446
- IV. 미중 간 신 해양전략의 경합 456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62

자연 및 기술시스템과 신흥안보의 창발